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본 한반도 정세와 과제

김석우 /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들어가는 말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5월 20일 우리의 민·군 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또 유엔 안보리는 사건 회부 35일 만인 7월 9일에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제2차 핵 실험을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채택하는 데 18일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약 2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 셈이다. 그만큼 국제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안보리 의장 성명은 천안함 사건을 규탄하여 문맥상 북한을 지목하는 편법을 동원했으나,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지 않으려고 버텼기 때문이다. 그 근원에는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가 붕괴를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중국이 안보상의 완충지대(buffer zone)를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고수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테러행위를 감싸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자신의 G-2 지위에 요구되는 도덕성에는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당초 북한 정권은 왜 무모한 무력도발행위를 감행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정권의 말기적 징후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사건은 세계를 경악시켰다. 남북관계에서 긴장이 고조에 달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과 북의 대립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북한정세를 관찰해 보기로 한다. 나아가 한반도 통일 문제와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위기에 처한 북한

1985년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1989년 베

를린 장벽 붕괴를 신호탄으로 하여 동유럽 공산권의 연쇄적 몰락으로 귀결되었다. 북한 정권은 이 도도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극단적 대책을 택하였다.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주체사상에 의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수령절대주의의 유일사상체계를 강화하였다. 중국이나 베트남 식의 개혁·개방 정책은 외면한 것이다. 개혁·개방은 김주석 가계의 세습체제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대 세습을 추진한다는 것은 뒤집어보면 개혁·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소련의 공산주의 실험이 70년 만에 실패로 끝났고 그 위성국들이 모두 자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마치 중력(重力)의 원칙에 거스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실적으로 이미 실패한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는 데는 중국의 지원이라는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유일지배체제 하에 강력한 주민통제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주민들의 창의적 발상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북한 경제가 스스로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흔히들 북한주민들이 아사(餓死)하는 이유로 외부 세계가 원조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매우 틀린 진단이다.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쉰(Amartya Sen)교수는 ‘식량과 인권’이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이 지구상의 모든 아사사태는 식량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정부를 비판할 최소한의 자유도 부인되기 때문이라고 갈파하였다.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북한 정권은 수백만 명의 주민이 굶어죽어도 근본적 해결책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북한경제는 1990년 이후 20년간 지속적으로 쇠퇴의 길을 밟아 남한의 1/40 규모에 불과하게 되었다. 식량, 원유, 경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은 중국이 지원을 끊으면 언제라도 붕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유일한 해결방안인 개혁·개방을 외면하고, 실제 그들이 택한 길은 미사일이나 핵무기 등 비대칭적 무기체계 개발이었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체제의 생존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 외부의 원조를 얻어 내었다. 남한에서 매년 10억 달러 상당액을 북한에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식량 부족과 기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 지원의 결과가 미사일,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무력개발과 천안함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의 도발행위로 나타났다.

이제 북한과 중국은 7월 9일자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테러 행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치부하고, 6자회담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이 사실인정과 사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약속은 피하면서,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북핵 6자회담을 하자는데 우리가 응할 수 있을 것인

가?

작년 11월 30일의 화폐개혁의 실패, 그리고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의 3대 세습 노력도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거 첫 번째 권력세습은 1974년 2월 김 위원장이 공식후계자로 지명되어 1994년 7월 김 주석이 사망하기 까지 20년여를 부자가 공동통치 하였고 그중 후반 10년은 김 위원장이 주도적 입장에서 북관을 통치하였다. 그에 비해 이번의 3대째 세습은 후계자의 연령이 젊고, 승계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의 권력승계 시기에 북한은 최악의 경제 상태에 빠져있다. 순조로운 권력승계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지난 두 정권 기간 사실상 기피되어 왔다.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의 통일 논의는 ‘북한에 대해 깔끄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에는 남북 간에 상징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공허한 목소리만 높였을 뿐이다. 그래서 당시 우리의 정책도 ‘통일정책’이 아니라 ‘대북정책’이라고 해야 옳았다.

통일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북한 정권이라면 늦어지는 통일보다는 빠른 통일이 오히려 통일비용을 적게 할 것이다. 통일비용이 막대한 것은 사실이나, 동태적으로 분석하면, 통일 비용보다 통일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북한 정권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킬 이유는 절대 없지만, 스스로 넘어지는 북한정권의 수명을 억지로 연장시키려는 노력이야말로 헛된 일이다.

또한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이 흡수하여 중국의 동북 제4성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한 때 회자된 일이 있다. 이야말로 국제정치의 기본을 무시한 논리이고, 그 근거에는 북한 주민들의 불행은 상관없이 북한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어느 주변국이건 간에 한반도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겠다는 욕심이 없는 나라는 없다. 중국이라는 아시아의 중심세력이 그러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할 경우 이를 흡수한다는 발상은 중국 자체가 분열하게 되는 불씨를 삼키는 것과 같은 무모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흡수할 경우, 한반도의 중국에 대한 저항은 쉽게 임계점을 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발전할 마찰·갈등관계가 중국 내의 티베트, 신장(新疆) 등 55개 소수민족 사회의 저항운동에 불을 붙이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분열로 치닫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의 3대 세습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전초적 징후가 천안함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문제가 중국의 비호로 무사하게 덮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한·미간에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가장 위협한 2012년 4월 17일에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하였다. 10년간 훼손되었던 한·미 동맹관계도 이 명박·오마마 대통령시대에 들어 거의 회복되었다. 어떤 형태로든 천안함 사건과 같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방어에 대한 북한의 도전은 매우 어려워진다.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중국의 비호행위도 언제까지나 반복하기 어려워진다. 중국은 북한 붕괴 방지를 위한 경제적 부담 이외에도, 중국 자체의 G-2로서의 지도적 지위에 주는 큰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웬만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중국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다시 일어나고 중국이 말려들어가는 길은 선택하지 못한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이룩해온 경제성장을 아직도 상당기간 지속시켜야 한다. 아시아의 현인이라 불리는 싱가포르의 리완유 선임장관이 7월 12일 한 심포지엄에서 “중국의 종합국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미국과 겨룰 정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책략에서 너무 멀어지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중국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한 조언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본 것이라고 하겠다.

앞으로의 과제

이제 우리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위기를 통일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만약의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주변국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고비는 중국을 설득하는 일이다. 동맹국 미국의 협력을 얻어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가 사라진다는 발상이 이제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에서 병력을 빼내야 할 형편이므로, 압록강, 두만강까지 미군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통일 이익을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의 결과 중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 과정에 한국의 경험이 크게 기여한 것처럼, 한반도 통일은 중국 경제성장의 제2의 기회가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전체가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지구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고, 나아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연간 40억 달러 수준의 장기적 투자계획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투자우선순위도 사전에 정하여 군사비 전용이나 낭비로 끝나는 전철은 밟지 않아야 한다. 실제 집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장기 계획은 급변사태를 거쳐 통일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원용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 중국도 중요한 협력당사자가 될 것이다. 한·중간의 방대한 경제·사회적 교류를 통해 이미 진척되고 있는 현실적 감각이 깊어지게 되면, 한국 통일이라는 필연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일현장’으로 발전시켜 우리의 통일지향 의지를 새롭게 피력하는 것도 필요하다.